당원용

new 한나라당

www.hannara.or.kr TEL. 02)3786-3000

하는가야 경제회생! 가는가야 선진한국!

한나라당 실천약속

한나라당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실천약속

NEW 대한민국

한나라당 일꾼들이
만들겠습니다

new 한나라당

NEW 대한민국

한나라당 일꾼들이 만들겠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뉴 대한민국' 을 건설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는 '서민경제 파탄' 이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뒤로 하고 편향된 이념의 코드에 사로잡혀 실속 없고 허구적인 개혁의 구호만 남발한 지난 3년의 국정운영 결과는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양산이었습니다. 경제파탄 뿐 아니라 나라의 안보와 외교, 교육과 복지 등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고에 지친 많은 국민들은 이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표로 이 정권에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려주고,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잡아 서민경제를 구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나가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책의 최우선을 '민생경제 회생' 에 두었습니다. 가정생활비 20% 감축을 위한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패자 부활의 기회를 넓혀주는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정책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과의 약속을 말 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겠습니다. 한번 내놓고 잊어버리는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매 2년마다 공약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 ,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뉴 대한민국 건설' 에 앞장서겠습니다.

2006. 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목 차

꿈과 희망의 서민살리기

7대 중점공약

1.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14
2. 서민생활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 15
3. 전 국민 GPS휴대폰을 통한 긴급구호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16
4. 조부모 양육 영유아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17
5.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17
6. 서민을 위한 뉴타운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 18
7.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8
※ '가정생활비 20% 다이어트' 5대 정책 / 20

파탄난 민생경제를 바로 잡겠습니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26

1. 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들을 확 풀겠습니다.
2. 신용불량자 문제를 '바로 내 문제, 우리집 걱정거리'처럼 생각하고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조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8

1. 서민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3. 서민부담을 경감하는 소득세제를 만들겠습니다.
4. 법인세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5. 거래세를 현실화하여 자산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도모하겠습니다.
6. 어음 세액공제제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7.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32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규제개혁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3.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한미 FTA 등 대외무역 개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5

1. 재래시장의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확충하여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37

1.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서민복지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42

1. 전 국민 모두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2.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 선진화된 노인복지정책수립을 통해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4.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통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저소득층의 통신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식품안전대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48

1.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공립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2.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목 차

□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49

□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50

1. 저소득층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공급을 보장하겠습니다.
2.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위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52

1.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4.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국선노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취업을 원하는 모든 계층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5

우리 자녀의 교육비를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 교육선진화로 우리의 내일을 밝게 만들겠습니다. / 58

1.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교육정보 이제는 공개해야 합니다.
2.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3. 자율형 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
4. 대학의 학생선발 및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5. 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6.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이공계대학을 육성하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63

1. 세계적인 이공계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2. 이공계대학의 교육이 산업현장과 밀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인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64

지방을 서울같이 상향 평준화 하겠습니다

□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천하고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68

1. 중앙정부 권한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4.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70

1. 주민자치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2. 주민소환제 도입 등 의회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구테크노폴리스, 광주첨단과학단지가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되도록 기반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 71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쾌적한 삶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74

1. 뉴타운 등 기존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3. 서민 ·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렌탈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4.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정책을 위해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및 재난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76

1. 지역에 맞는 버스교통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 교통안전 및 교통재난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사회를 가꾸겠습니다. / 78

1.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으로 소모적 갈등을 없애겠습니다.
2. 환경 생태축을 보전, 복원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 도심 속의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 목 차

4.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 농 · 수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84

1. 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상에서 농어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농 · 축 · 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등 품질경쟁력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 지속적인 항만 시설 확충을 통하여 동북아 물류 허브(HUB)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어민의 불편해소 방안 및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86

1. 고령 영세소농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겠습니다.
2.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 조류 · 가축질병 검역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4.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 감척 대상 어민 대책과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지방교부금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7.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의 보육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92

1.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3.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 농어촌지역 및 긴급지원 가정에 특별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 누구든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여성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겠습니다. / 95

1. 여성의 취업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2. 양성평등한 부부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97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 미혼모 가정, 우리가 안아야 합니다.
3. 이주결혼여성 및 혼혈인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99

1. 생활정치 현장에 여성의 대폭적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여성의 권익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100

1.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민생치안 확보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104

1. 지역맞춤식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치안 인력 증강 및 장비의 현대화로 민생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폭력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 105

1. 휴대폰을 통해 성폭력 등 위험으로 부터 긴급구호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2.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3.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서민들이 문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 110

1. 도서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2.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배당이익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미래의 국가경쟁력인 문화예술을 진흥하겠습니다. / 112

>> 목 차

1.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겠습니다.
2. 전통공예산업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겠습니다. / 113

1. 국공립예술기관의 객석 10%를 문화소외계층과 나누겠습니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114

1.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 국민통합적 기능을 가진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115

1. 비인기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 장애인종합체육시설(장애인선수촌)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3. 돔 야구장을 만들겠습니다.
4.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언론을 만들겠습니다

□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120

1. 난시청지역 기초생활수급 세대에게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TV 수신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 120

1.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122

1.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KBS를 만들겠습니다.
2. 음란 · 패륜방송을 강하게 처벌하여 건강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3. 방송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혈세를 내돈같이 아껴쓰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 126

1.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습니다.
2.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127

1.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 국정원을 새시대에 맞게 개혁하겠습니다.
3. 통신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법률구조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비효율적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정부기관을 과감하게 M&A(통합)해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129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습니다. / 130

□ 계속 늘고만 있는 공공부문의 규제 수를 확 줄이겠습니다. / 131

군의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 군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134

1. 50만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해 전문의료단의 양적 질적 향상 및 이에 필요한 의료체계 개선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에게 국방의 기회를 전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135

1.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사병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의 장교와 부사관의 인력도 크게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로써 2020년까지 여군인력을 전 병력의 5% 수준(2만5천명)으로 증원해 나가겠습니다.

목 차

□ 군에서부터 혼혈인을 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 136

1. 혼혈인들이 병역의무 제한으로 받는 유 · 무형의 불이익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장교 ·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주민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138

1.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제정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평화 공존과 화해협력의 실질적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갈라진 우리민족"의 생사확인 · 상봉 · 재결합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와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 140

1.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 실행원칙을 이행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북한의 위폐와 가짜 담배 및 가짜 양주 제조 등 국제범죄 행위를 적극 막겠습니다.

□ '고립'이 아닌 '공조 · 협력' 중심의 외교시스템 확보와 안정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141

1. 주변국과의 공조 · 협력 중심의 외교시스템을 확보하여 재외국민의 보호와 권익신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통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서민살리기

7대 중점공약

1.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2. 서민생활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3. 전 국민 GPS휴대폰을 통한 긴급구호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4. 조부모 양육 영유아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5.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6. 서민을 위한 뉴타운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7.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정생활비 20% 다이어트' 5대 정책

가정마다 교육비로 인한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1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81%인 우리사회에서 높은 등록금 부담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큰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가정경제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마다 교육비 부담이 심각함. 대학 재정지원체계의 근복적인 개혁을 통하여 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대학 재정의 확충과 재원의 다양화를 통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대책 추진

가. 국가차원의 장학제도 구축

○ 입법을 통한 장학기금 마련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제도 강화

○ 산학연계 강화 및 인턴쉽 프로그램 다양화 등 근로장학제도 강화

나. 개인학습계좌제도 도입

○ 군 사병 봉급을 인상하고 이를 대학등록금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평생학습 비용 지원으로 연계시키며, 여성의 경우 출산여성의 직업훈련 및 재교육 장려와 이를 개인학습계좌를 통해 지원

다.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

○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10만원 세액공제 제도 도입

라. 대학의 재원다양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 고등교육재정지원 입법을 통한 포뮬러펀딩 도입으로 합리적인 대학재정 확충과 지방대 및 취약계층의 고등교육지원책 병행

○ 연구비관리제도 개선, 간접연구비 30% 실시

○ 사립대의 각종 부가가치세 및 운영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마. 대학재정의 투명화 · 효율화 강화

○ 물가상승률과 대비해 산출된 대학의 등록금인상 과표가 과도한 경우, 대학 홈페이지에 등록금 인상에 대해 각종 지출내역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공개와 대학의 재정건전화 노력

(전입금 및 학생지원 등) 및 계획을 게재토록 하고, 필요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책무성을 강화

○ 이원화된 재정운영을 일원화 하는 대학회계 제도 도입(현재 교육위에 제출된 「국립대재정운영특별법」 통과 강력 추진)

○ 대학 예산계획 수립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적정교육비' 산출 및 공개 의무화

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재원확보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감축 및 새로 발굴되는 세원은 고등교육 강화에 우선

○ 참여정부 이후 정부조직 비대화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불필요한 조직의 경상경비 10%이상 감액 등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

○ 국가지원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각종 건설폭리 세원 확보는 저소득층 인적자원개발사업 투자로 환원

가벼워진 주머니, 서민경제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서민생활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속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의 감세정책 추진

가.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 추진 중

나. 장애인 차량 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 추진 중

다. 경형 승용차 및 경형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면제

○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 · 추진 중

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현실화

○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을 4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현행 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 추진 중

마. 거래세 현실화

○ 등록세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 추진 중

바. 어음 세액공제제도 현실화

○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의 결제시기를 30일 이내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 혜택 부여(대기업 0.4%, 중소기업 0.5%)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 추진 중

사.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결식아동에 대한 법인기부금 100% 손비처리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 추진 중

우리의 가족들이 위험으로부터 방치되고 있습니다.

3 전국민 GPS 휴대폰을 통한 긴급구호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 혼자사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국민들을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휴대폰에 대한 긴급호출서비스 추진

☞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GPS기능의 휴대폰(수신기 등)을 통해 긴급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에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제도화 추진

○ 긴급호출 신고시 경찰 112 신고센터 등과 실시간 연계 구호

○ 추가 비용은 국가 부담, 별도의 호출장비 지급

○ 혼자사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심장발작 등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재난 상황 등에서 즉각적인 구호 추진 및 실종아동 발생시 아동의 현재 위치 혹은 최종 위치 신속 추적 활용

○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책가방에 장치하도록 하고, 독거노인의 경우 별도의 호출 장비 지급

영유아 보육부담으로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4 조부모 양육 영유아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현 보육정책은 보육욕구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위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내 조부모, 친인척 보육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을 통해 조부모 등 보육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고 가정과 국가가 보육에 공동 참여코자 함.
또한 정규직 여성 중심의 육아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정규직 및 자영업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보육지원책 추진

☞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부모 · 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해 육아수당 지급
○ 점차적으로 전체아동대상 육아수당제도 확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불안합니다.

5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법개정안(보험료인상, 급여인하)은 연기금의 고갈 시기를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납부예외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제도가 될 수 없음
전국민 연금혜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추진

☞ 기초연금도입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중

○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젊은 시절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급

○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 지급

○ 재원은 가입자 부담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 국민연금가입자의 부담 경감

도시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6 서민을 위한 뉴타운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주택, 교통, 환경 등 생활여건의 차이가 심화되어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현행 제도로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로 주거환경을 원활하게 개선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기존도시에서 주택공급 확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

☞ 소위 뉴타운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개정, 별도 특별법 제정 추진

- 도로 · 공원 · 학교 ·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

자유무역협상으로 인해 농어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7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영세 노령화 및 공동화, 늘어만 가는 부채, DDA 협상, 한 · 미 FTA 협상 등 새로운 시장개방 확대추세에 따른 대책 미흡 등으로 열악한 실정임.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대책 추진

가. FTA협상에서 농어민 이익 최대한 보장

○ 3자협의체(정부-국회-농어민) 구성

○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농어업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반영

나.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

○ 농업협동조합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발전 도모

○ 친환경적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지원

○ 고령 영세농어민 대상 특별보조금 지급

다. 농어촌 및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 강화

○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확충

○ 농어촌 지역의 초 · 중 · 고 학교 급식비 반값 지원

○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의 여성농어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강화

○ 영 · 유아 보육비 지원 · 확대

라. 어촌 관광 활성화

○ 어촌관광정보센터 건립 · 지원

○ 감척대상에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마.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 강화

○ 침수대비 배수개선답율 확대(05년 68.9%→07년 73.4%)

○ 자연재해 복구 지원은 "선집행 후정산" 처리

'가정생활비 20% 다이어트' 5대 정책

1) LPG 특소세 면제 등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 필요성

○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어 택시 기사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방안이 필요

- 업계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만으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 운송 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예산 부족을 문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음

○ 경형 승합차와 경형 화물차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경형 승용차와 달리 면세 규정이 없음

□ 공 약

○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장애인 차량 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경형 승용차 및 경형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 ·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필요성

○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 60%, 경유 47.8%, 등유 30.7%의 높은 세율로 국민들과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생계형 차량에 의존하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 특히 부담

□ 공 약

○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각각 10%씩 인하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 ·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동전화 단문문자메시지(SMS) 서비스 무료화 등 통신요금을 인하하겠습니다.

□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계비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가 넘는 것으로 답하고 있음.
- 2004년말 현재 가구당 통신비는 가계지출비의 6.5%에 이르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2%의 3배를 넘는 것임.

○ 통신요금 급등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통신비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통신업체의 요금 결정에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공 약

○ 이동전화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이동전화 단문문자메시지(SMS) 서비스 무료화 추진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4) 조부모양육 영유아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필요성

○ 현 보육정책은 보육욕구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위주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가정 내 조부모, 친인척 보육의 경우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을 통해 조부모 등 보육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고 가정과 국가가 보육에 공동 참여하고자 함.
또한 정규직 여성 중심의 육아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정규직 및 자영업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보육정책 마련이 필요함.

□ 공 약

○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부모 · 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점차적으로 전체아동대상 육아수당제도로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방안

○ 여성의 취업, 조부모의 양육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육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 EBS 수능교재 가격을 인하하여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성

○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방송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많이 하도록 발표한 2004년 4월부터 EBS가 수능교재 판매로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이를 제작비로 충당하고 있어 판매 수익의 사회 환원이 필요

□ 공 약

○ EBS 수능교재 가격을 인하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EBS 수능교재 무상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추진방안

○ 전체 수험생의 60-70%가량이 구입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EBS 수능교재 구입비는 결국 사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수능교재 가격을 인하하여 수능교재 판매수익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겠습니다.

○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